

Government's Priorities and Policy Directions for Disaster Safety in Korea

Chang Ho Hwang[†]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Dong-A National University, 225 Guedeok-ro, Seo-gu, Busan, Korea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suggest the government's priorities and policy directions for disaster safety in Kore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area of policy tasks, "society with safety experience" ranked highest, followed by "win-win society with technology-based safety", and "society with future sustainable safety". In the area of policy tools, human factors ranked highest, followed by financial factors, legal institutional factors, and organizational factors. According to the importance analysis of the sub-categories of policy tasks and tools, "widespread safety culture in life" ranked highest, followed by "development of public security services," and "re-establishment of safety standards.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the future government in Korea with the basic data for establishing policy directions and agenda for disaster safety.

Key words: disaster management, policy priorities, AHP analysis, safety culture, safety standards

1. 서론

세계 경제 10위권 이내로 성장하기 까지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위기에 직면하여왔다. 그때마다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위기를 사전에 어떻게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게 부각되었다(Yu, 2018). 위기에 대한 개념은 개인이나 조직, 지역사회 또는 사회 전체에 불안정하고 위협한 상황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사건(Lee, 2012)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정부의 위기관리 역량이 미흡할수록 사회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정부의

위기는 테러나, 전쟁과 같은 군사적 위협과 같은 안보의 개념에 초점을 두었다면 최근에 들어와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재난이나 자연적 재난의 심각성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산업화시대에는 주로 태풍, 호우와 같은 전통적인 자연재난에 정부의 정책이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연쇄적 피해를 유발하는 플랜트형 재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각성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플랜트형 재난이 위험한 이유는 1차적으로는 막대한 시설파괴를 가져오고 2차적으로는 해양이나 대기오염, 3차적으로는 지역주민의 피해로 이어져 대규모의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이다(National

[†] Corresponding author: Chang Ho Hwang, Tel. +82-51-200-8680, Fax. +82-51-246-0610, e-mail. selefho@naver.com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2016). 특히 최근 발생하는 기상이변과 급격한 사회변화와 맞물려 자연 및 인적재난의 규모와 형태가 대형화, 복잡화됨에 따라 재난의 발생시점과 발생장소 그리고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예측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Kim & Lee, 2014).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회기반시설의 대형화, 고도화로 인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점차적으로 대규모화 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요인 또한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의 재난안전에 대한 대응역량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대형재해나 재난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역량이 중요한 이유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2007)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미국의 뉴올리언즈의 인구는 급속히 감소하였으며 인구감소로 인하여 세수확보 부족, 일자리 부족, 산업경제의 악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적으로는 최근 몇 년 사이 포항과 경주,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생활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Yu, 2018). 그렇다면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과거에 비해 급격하게 증폭하였으며 더 이상 우리나라도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 증가와 외국 이주민들의 유입은 재난 취약계층의 증가를 불러왔고, 주변 시설물의 노후화는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우리나라도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는 문제인식을 통해 국민들이 재난사고로 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심사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이 실질적인 안전사회를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

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의 재난안전 분야는 선진국에 비하여 정부투자의 상대적인 부족함, 부처별 재난안전 공동 아젠다 발굴 및 사업화의 미흡, 부처간 재난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체 부족 등 여전히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선진안전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정부의 재난대응 정책수립의 방향은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 미래 정부의 재난안전 대응 및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며 구체적인 방향설정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의 재난안전 대응정책에 대한 방향과 구체적인 우선순위 도출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될 재난대응 정책수립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

1. 현대사회에서의 재난안전의 중요성

재난의 개념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재난의 유형은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할 수 있다(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2016). 자연재난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대설·가뭄·지진(지진해일)·황사, 조류, 화산활동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을 의미한다(Natural disaster law, 2018; Disaster & Safety Management Basic Law 2019). 반면에 사회재난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태풍·홍수·호우 등 자연재난을 제외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재방사, 환경오염사고 및 이와 유사한 사고로 피해를 주는 재난을 의미한다(Disaster & Safety Management Basic Law 2019). 이밖에 해외재난을 들 수 있는데 대한

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의미한다(Enterprise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2010). 이러한 재난의 발생에 따라 정부의 경제적 손실 또한 변동폭이 큰 편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비슷한 유형의 재난이라 하더라도 발생지역에 따라 경제적 손실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 규모가 큰 선진국일수록 재난이 발생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2016).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안전처가 출범하고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이 새롭게 시행되었는데 주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최초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1977년 방재계획의 수립을 효시로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 현재 제 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급격한 환경적 변화와 더불어 시대적 변화의 요구에 따라 풍수해와 가뭄, 지진 등의 자연재난 중심의 계획에서 사회재난에 대한 계획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재난안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현대사회는 건물의 규모가 더욱 복잡하고 고층화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다 가스관, 송전선 등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지니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이 더욱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현대사회에서 대규모 피해를 동반하는 각종 재난 및 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17). 그러나 재난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시스템의 발전을 포기하거나 축소할 수 없기 때문에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도모하기 위한 재난관리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재난예방은 일반적으로 성과를 측정하거나 효과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아 투입대비 가시적인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우며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Lee, 2012; Lee, 2014). 또한 지자체 수준에서 보면, 재난 발생시 관련 대응

및 복구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집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재난예방 대책을 마련할 유인이 크지 않다(Jeong, et. al, 2016). 그렇다보니 정부의 재난대응 정책은 지금까지 임시방편적으로 흘러왔으며 그 과정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며,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들이 무분별하게 집행되어 왔다.

한편, 국민들의 생활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사전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2010년 이후 큰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는 가슴기 살균제 사건은 2017년 8월 기준으로 피해자가 5,729명에 이르며, 이 중 사망자는 1,22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17). 이 사건은 유해화학 물질 등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대중의 위험인식 및 재난안전 관리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환경·안전·보건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수준은 대개 국민소득 수준과 비례하며, 1만 달러, 2만 달러, 3만 달러 수준에서 크게 변화하는 특징이 있다(Future Strategy Research Center, 2017). Future Strategy Research Center(2017)의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시점에서는 국민들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만 달러 정도가 되면 안전에 대한 의무와 권리의식이 커지며, 국민소득 3만 달러 정도가 되면 건강문제가 개인이 아닌 국가와 사회 차원의 문제로 인식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폭하고 있으며 안전사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즉 경제가 발전할수록 정부를 재난안전관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재난안전 사고의 예방 또는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는 정부의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으며, 정부의 재난안전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가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라 할 수 있다.

2. 환경변화와 재난대응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지나오는 동안 정치, 사회, 경제, 환경,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변화를 맞이하여 왔다. 첫째 사회환경변화로 대표되는 것이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나타나고 있는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인구구조는 인구규모와 함께 정부의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지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인구가 크게 급증하고 있다. 고령인구의 증가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부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이기도 하지만 재난분야에서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즉, 기존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재난 운영계획 및 지침이 수립되었다면 재난대응에 취약한 고령계층을 위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재난예방 및 대응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고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National Statistical Office(2016) 자료에 의하면 2045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 중 36.3%(810만 가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6). 결혼을 기피하는 비혼 세대의 증가와 가치관 및 삶의 방식의 변화, 결혼비용의 증가 등 여러가지 사회·문화·경제적인 이유로 1인 가구의 세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¹⁾. 그리고 인구구조의 또 하나의 특징은 외국인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구의 국내유입의 증가는 한국사회의 인구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결혼, 외국 유학생 등의 급격한 유입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의 사회적 차원에서의 변화를 인구구조의 측면에서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인구의 증가, 1인가구의 증가, 외국인 증가 등 상대적인 재난취약계층의 증가를 불러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정부의 재난안전 정책방향도 인구구조의 변

화로 인한 재난취약계층에 초점을 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성이 있으며 인구변화에 따른 자연적·사회적 재난 및 재해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그에 맞는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환경변화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환경변화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국민들의 생활양식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IT 산업의 발달과 정보통신기술의 인프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최첨단 스마트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첨단기술은 더 이상 소수의 분야에 국한되거나 일부 계층에게만 접근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최첨단 기술을 재난안전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ICT기술을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나아가 개개인의 위치를 기반하여 선별적이며 적극적인 정보전달이 가능해졌으며 재난의 발생시간과 경보시스템이 시차없이 이루어지게 되었다(Disaster Prevention and Safety Technology Institute, 2018). 반면에 우리나라는 ICT 역량이 높지만 이와 함께 ICT 관련 재난에도 노출되어 있다. ICT이전의 시대에는 물리적인 금고, 서류 등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네트워크 상의 보안, 개인정보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는 오프라인 상의 경제범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사회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Korea Internet Promotion Agency, 2016). 따라서 정부도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에 급격하게 발전한 최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재난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시에 인터넷의 발달로 급속도로 확산되기

1) 2015년 현재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전체 가구의 20.6%를 차지하고 있으나, 2035년에는 40.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자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7.4%이나, 20년 후인 2035년에는 15.4%로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2015)

시작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처도 중요하게 되었다.

셋째, 경제적 차원이다. 미국 9.11 테러, 폭탄테러 등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테러의 위험은 전 세계적으로 공황뿐만 아니라 주요 기반시설 전반에 걸쳐 보안개선에 나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2016; Disaster Prevention and Safety Technology Institute, 2018).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보안체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재난안전 분야에 접근할 때 다수의 국민들이 일상 생활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다뤄야 하며 산업화에 따른 산업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017).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2016)의 자료에 따르면 안전산업은 기술안전을 중심으로 산업이 성장해 왔으나 최근 융합된 안전 분야가 새로운 성장 축으로 부상하였으며, 지식정보 안전산업이 재난안전산업 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급격한 산업의 성장과 경제의 발전으로 보호해야할 주요시설물의 종류가 보다 다양해졌고, 정부는 국가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시설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통합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변화이다. 기후변화는 1966년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에서 정의한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의 변화”를 일컫는다. 기후변화의 증거로는 기온, 강수량, 해수면 온도 변화 등으로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해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등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8). 해수면 온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기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National Statistical Office(2018) 자료에 따르면 1900년부터 2010년까지

110년 간 서울 지역의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으며 기온의 증감 폭이 초기 1900년부터 1950년까지는 약 9.5도에서 약 12도 사이를 증감하였다면, 후반기인 1960년부터 2010년까지는 약 11도에서 약 14도 사이를 반복적으로 증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통계연구센터(Centre for Research on the Epidemiology of Disasters, CRED)의 EM-DAT 자료를 토대로 전 지구적인 자연재난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1975년부터 자연재난 발생 건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1995년 이후부터 2005년까지는 증가폭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Disaster Prevention and Safety Technology Institute, 2018). 이상기후변화는 국지성 폭우, 열대야를 능가하는 폭염, 중대형 태풍의 증가, 미세먼지 및 황사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대기오염에 따른 심장혈관질환의 발생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Jeong, 2014). 따라서 이상기후변화에 따른 관계부처(행자부,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농림부)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며 이상기후변화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종 재난이나 신종재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책적 차원이다.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정책방향은 국민안전처가 출범하고 새롭게 구성되었으며 자연재난 중심의 계획에서 사회재난에 대한 계획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재난안전분야에서의 현 정부의 국정기조는 ‘국민 안전서비스’, ‘4차 산업혁명’, ‘안전산업 육성’, ‘현장대응 역량 강화’ 등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재난관리 정책방향을 분석하면 IT 첨단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을 강조하고, 비효율적이던 조직을 재정비하여 국민의 안전을 강조하는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18). 그러나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에 대한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안전보장은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임에 동시에 국민들의 삶의 질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층 높

아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환경변화와 정부의 재난대응의 관점에서 내용을 종합하면 특정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이라 하더라도 그 규모에 따라 국가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급격한 산업의 성장과 경제의 발전으로 보호해야할 주요시설물의 종류가 복잡다양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물 안전과 품질개선을 통해 국가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시설물의 통합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고령인구의 증가는 재난을 예방하는 방식은 물론 재난이 발생할 때 인명 구조 체계 및 구조 방식의 변화도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재난취약계층의 증가로 정부의 재난안전 정책방향도 이러한 취약계층에 초점을 두는 실천과제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적 차원이다. ICT와 재난안전의 융합은 정부의 재난안전 대응에 대한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방안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정부 역시 재난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ICT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각 부처가 소관 영역에 근거한 산발적 유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투입 대비 산출의 효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ICT와 재난안전 융합을 위한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범 부처 협의체를 구축,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끝으로 정책적 차원으로 정부는 미래 위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여 분야별 안전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미래 안전사회 구축 및 확대를 통해 실제 현실에서 국민들의 안전체감도를 극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사회적 재난 수준이 점차 심화되고 복잡해지고 있

다. 특히 사회가 산업화 이후로 더욱 도시화되면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구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즉 자연재난의 발생은 심각한 사회재난으로 이어지고 사회재난은 자연재해·재난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집중 호우나 태풍으로 인해 도로나 건물이 파괴되기도 하며 유조선의 기름유출로 해양오염을 유발하여 바다 생태계가 위협해지기도 한다(Disaster Prevention and Safety Technology Institute, 2018). 우리사회의 재난은 자연재난을 기본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재난 대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다소 낮은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 사회에서는 사회재난에 대한 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의 상호 파급력에 대한 수준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Kim(2016)의 연구에서도 특정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이라 하더라도 그 규모에 따라 국가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실제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자연재난 중 가장 대표적인 홍수피해의 발생은 금속제품, 비금속광물제품, 화학제품 등 여러 산업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Kim, 2016) 최근에 부각되는 미세먼지의 발생은 전통시장의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국내외 다양한 학자들이 재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에서 재난 발생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Rasmussen, 2004; Raddatz, 2007; Noy, 2009). Hsiang & Jina(2012)의 연구에서는 1950-2008년 사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열대성 태풍이 국가의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누적영향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는데 강력한 태풍의 발생은 해당시점에서 최소 20년간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자연재해의 피해가 누적적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ong,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자연재해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국가별 분석을 통해 자연재해의 발생은 국가 GDP의 감소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한국의 경우 홍수로 인하여 한국

의 GDP가 0.1%에서 최대 0.16% 감소하였다고 한다.

재난분야는 사회적으로 시사성이 큰 주제로서 지금까지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재난분야의 기존 연구를 분석한 결과 크게 4가지 연구경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재난 발생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Rasmussen, 2004; Raddatz, 2007; Noy, 2009; Hong, *et. al.*, 2014; Kim, 2016)²⁾ 둘째,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와 재난정책을 살펴보고 발전방안을 제시한 연구(Jeong, 2009; Kim, 2011; Lee, 2014; Kim, 2016; Yu & Yeo, 2017)³⁾ 셋째, 재난피해의 상황과 미래 재난대응전략에 대한 연구(Jeong, 2014; Park, 2016; Lee & Kwon, 2017; Park, 2017)⁴⁾ 넷째, 재난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Lee & Yang, 2004; Kwon & Kim 2014; Kim & Moon, 2015; Yoon, *et. al.*, 2017)⁵⁾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 재난관련 연구경향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재난발생 현황 및 원인, 재난관리체계, 재난대응정책, 재난사례분석, 재난관리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재난관련 분야에서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의 재난정책의 우선순위를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의 정부의 재난대응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

는 부분을 살펴보는 연구 또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의 재난대응정책에 대한 적절하고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이 마련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공헌과 한계점을 바탕으로 정부의 재난안전 대응정책에 대한 방향과 구체적인 우선순위 도출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될 재난대응 정책수립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및 자료수집

현재의 재난안전분야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구조를 지닌다. 과거와 달리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하여 각각의 요인들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고, 영향요인 또한 다양화되고 있으며, 영향의 속도는 매우 빠른 특징을 지닌다(Park, 2010). 재난안전 분야를 둘러싼 환경 또한 매우 빠른 변화를 경험 중에 있으며 재난안전 분야에 반영할 다양한 이슈도 빠르게 변화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난 안전분야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각종 이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재난안전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의 재난안전 대응정책에 대한 방향과 구체적인 우선순위

- 2) 재난발생은 피해의 누적으로 경제에 통상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경우에도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GDP의 감소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siang & Jina; 2012; 홍중호 외, 2014; 김형수, 2016)
- 3) 정지범(2009)의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각국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관리정책을 분석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기후변화 완화전략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적응전략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병석(2016)의 연구에서는 정부의 재난대응체계를 검토하면서 녹색도시조성에 대한 정부정책의 미흡함과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유선철·여관현(2017)의 연구에서는 정부의 재난대응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는데 기후변화완화, 적응, 탄소시장 및 재원 순으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고 신재생에너지 및 자원순환체계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4) 이유현·권기현(2017)은 국제사회의 재난정책 패러다임과 국내 재난정책의 전략을 비교하였는데 한국의 재난정책은 국제사회에서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박관규(2017)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재난안전시스템의 특성을 분석하고 주민들의 재난안전의식수준의 제고와 재난안전사고의 감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박시원(2016)의 연구에서는 재난에 대한 피해가 주로 취약한 계층에 집중되기 때문에 개발 계획 및 이행단계에서부터 재난대응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보영(2014)의 연구에는 미세먼지·황사 등 대기환경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에 따른 심장혈관질환의 발생에 대한 대처 및 취약집단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의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 5) 권용수 외(2014)의 연구에서는 재난안전관리 교육훈련이 재난대응정책의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재은, 양기근(2004)은 재난관리에 있어서 효과성 제고 방안으로서 시민참여, 그리고 국가·시장·시민 간의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윤건외(2017)는 재난안전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제도나 예산/인력/시설/연구개발과 같은 기반적 요소와 공무원들의 전문성, 정부의 협력성 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도출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방법론으로는 전문가 AHP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재난안전 분야의 정책방향과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AHP 분석은 경제, 경영, 국방, 정치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의사결정 지원방식의 하나로써 복잡한 평가기준을 계층화하여 요인들에 대한 단계별 쌍대비교를 수행하고, 다수 대안에 대한 다면적 결함을 수행하는 분석기법을 의미한다(Harker & Varga, 1987; Jeong, 2013). 또한 AHP 분석방법은 일반적인 대규모의 설문방식보다는 관련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문제해결 및 대안도출을 위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소규모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의 AHP 분석의 설문 대상이 되는 그룹은 행정학 분야의 박사 및 교수 25인과 재난안전 분야 연구기관의 전문가 5인으로 총 3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자료 수집은 2018년 3월에 1차적으로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동일한 설문항목으로 2018년 12월에 10명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자료를 취합하였다.

AHP분석의 평가영역과 평가요소의 구체적인 도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과제 영역의 대분류와 중분류에 대한 선정은 2018년 행정안전부 “제3차 재난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추진전략을 참고하였다. 종합계획에서는 재난·안전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책과제를 시행하고 있는 17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재난안전을 위한 3가지 추진전략(국민안전확보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개발, 미래신종 재난 대비 재난안전 기술선진화, 현장 실용화 중심의 안전생태계 구축)과 10개의 실천과제(국민생활 안심 서비스 개발, 재난피해자 지원서비스 개발, 재난피해로부터 회복력 강화 기술개발, 재난·안전 위험요소 예측·영향평가 기술개발, 빅데이터 기반 재난안전 정보활용 기술개발, 재난안전 융·복합 대응 기술개발, 로봇 및 인공지능 기반 재난안전 관리지원 기술개발,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재난안전산업

실용화지원 기술개발, 현장중심 협력형 기술개발)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정책수단 영역의 대분류와 중분류에 대한 선정은 Disaster Prevention and Safety Technology Institute(2018)에서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 산업육성지원사업의 연구과제>로 수행한 ‘재난안전기술개발 경쟁력 강화 및 산업육성지원’의 연구보고서에서 전문가 AHP 평가항목으로 분석한 자료와 정부의 재난정책 효과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선행연구(Cho, 2010; Kwon, et. al, 2014; Kim, et. al, 2014; Choi, 2014; Yoon, et. al., 2017)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였다. 행안부 재난안전산업육성지원사업의 보고서에서 전문가 AHP 분석을 통한 정부의 대응정책방향으로 제시한 요인은 크게 5가지(예산요인, 협업요인, 인적요인, 법제도적요인, 교육훈련요인)과 25개의 평가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재난정책의 효과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한 변수들을 살펴보면 Yoon, et. al(2017)의 연구에서 재난대응 전문가 설문조사로 측정된 변수로는 관리요소로서 리더역량, 인적요인의 전문성, 정부내 협업, 정부-민간협업, 기반요소로서 법제도, 자원 변수를 제시하고 있다. Cho(2010)의 연구에서는 재난안전 법제도 정비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Jeong(2012) & Choi(2014)의 연구에서는 예산이나 인력 또는 시설·장비구축 등의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Kwon, et. al(2014) & Kim,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재난분야의 담당인력의 전문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평가영역과 평가요소의 도출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책과제영역에 대한 대항목은 국민체감안전사회, 미래지속가능안전사회, 융합기술상생안전사회 3개의 항목과 8개의 중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정책수단영역에 대한 대항목은 조직요인, 인적요인, 재정요인, 법제도적요인 등 4개 대항목과 16개 중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정부의 대응정책 방향과 우선순위의 도출은 전문가 AHP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3단계로 구성하였다. 1단계에서는 전문가

Table 1. Evaluation elements of expert AHP analysis

Main-Category		Sub-Category	
Policy Task Area	National security society	National security service development	
		Expansion of life safety culture	
	Sustainable society	National contingency plan	
		Establish safety standards	
	Convergence technology win-win safety society	Disaster response through technology convergence	
		Disaster safety technology development	
		Disaster safety ecosystem	
		Big data-based disaster safety ecosystem	
	Policy Tool Area	Organizational factors	Specialized agency for disaster response
			Disaster safety association
Disaster safety information sharing			
Establishment of disaster safety department			
Personnel factor		Disaster safety expert	
		Disaster safety responsibility	
		Disaster safety concerns	
		Director's interest and support	
Financial factor		Disaster safety R&D	
		Disaster safety training	
		Development of disaster safety agenda	
		Disaster safety compensation	
Legal factor		Disaster safety prevention plan	
		Disaster safety information for the public	
		Disaster command system	
		Development of facilities damage standard	

AHP 조사 결과에 따른 각각의 대분류 항목과 중분류 항목의 가중치를 취합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2단계에서는 각각의 도출된 가중치를 합산하여 개별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3단계에서는 도출된 가중치를 중심으로 정책제언을 바탕으로 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IV. 재난안전 정책과제 우선순위 및 정책방향

본 연구에서는 환경분석을 통해 재난안전분야를 둘러싼 환경변화를 살펴보고, 정부의 재난안전 분야의 우선순위 도출과 재난대응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 Priority for main-categories for disaster safety

Main-Category		Weight	Priority
Policy Task Area	National security society	0.415	1
	Convergence technology win-win safety society	0.375	2
	Sustainable society	0.253	3
Policy Tool Area	Personnel factor	0.371	1
	Financial factor	0.275	2
	Legal factor	0.194	3
	Organizational factors	0.097	4

AHP 분석은 사회과학분야의 연구과정에서 비교척도가 존재하지 않거나 평가기준이 다양한 경우 정량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요인을 분석하는 의사결정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Choi, 2008; Yu & Yeo, 2017). 본 연구를 위한 자료의 일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Consistency Index(일관성 지수) 값은 전문가들의 응답결과가 모든 항목에서 0.10 이하로 나타나 응답내용의 일관성 측면은 신뢰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활용된 조사 표본은 AHP 분석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 판단 할 수 있다.

재난안전 대응에 대한 정책과제영역⁶⁾과 정책수단 영역에 대한 가중치를 산출하였는데 대항목 간의 가중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정책과제영역에서 국민체감안전사회 항목이 0.415로 가장 높은 가중치를 나타내고 있었다. 다음으로 융합기술상생안전사회 0.375, 미래지속가능 안전사회 0.253 순으로 가중치가 조사되었다. 둘째, 정책수단영역의 측면에서는 인적요인 항목이 0.371로 가중치가 가장 높은 항목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재정요인 0.275, 법제도적 요인 0.194, 조직요인 0.097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난안전 대응에 있어 정부가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측면이 전문가들은 정책과제 측면에서는 국민체감안전사회를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정책수단의 측면에서는 인적요인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민체감안전사회에 해당

6) 정책과제 영역의 대분류와 중분류에 대한 선정은 2018년 행정안전부 “제3차 재난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추진전략을 참고하였다.

하는 국민생활 안심서비스 개발, 생활속 안전문화 확산 등의 정책도입이 다른 정책과제보다 중요한 정책임을 시사한다. 또한 정책수단적 측면에서 인적요인을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는 것은 재난안전전문가육성, 공무원들의 재난안전책임성강화, 주민의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 재난대응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과 같은 요인이 다른 정책수단적 요인보다 중요한 것을 의미한다.

대분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중분류는 각각의 대분류의 범위 내에서 중분류한 항목들을 비교하여 가중치를 도출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정책과제 영역에 대한 중분류 항목에 대한 중요도 분석결과 첫째, 국민체감안전사회의 측면에서는 생활속 안전문화 확산(0.517)이 국민생활 안심서비스 개발(0.431)보다 상대적 우선순

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미래지속가능한 전사회의 측면에서는 미래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기준체계 재정립(0.540)이 국가비상계획수립(0.410)보다 상대적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융합기술상생안전사회 측면의 중분류 항목에서는 기술융합을 통한 선제적 재난대응(.0320)에 대한 항목이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은 항목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ICT 융합형 재난안전 생태계 구축(0.273), 재난안전 융·복합 대응 기술개발(0.185), 빅데이터 기반 재난안전 생태계 구축(0.097) 순으로 중요도가 높은 중분류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정책수단영역에서의 중분류 항목에 대한 중요도 분석결과 첫째, 조직요인의 측면에서는 범부처 재난안전 협의체 구축(0.376)에 대한 항목이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은 항목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

Table 3. Priority for sub-categories for disaster safety

Main-Category	Weight	Priority	Sub-Category	Weight	Priority	
Policy Task Area	National security society	0.415	1	National security service development	0.431	2
				Expansion of life safety culture	0.517	1
	Sustainable society	0.253	3	National contingency plan	0.410	2
				Establish safety standards	0.540	1
	Convergence technology win-win safety society	0.375	2	Disaster response through technology convergence	0.320	1
				Disaster safety technology development	0.185	3
				Disaster safety ecosystem	0.273	2
				Big data-based disaster safety ecosystem	0.097	4
Policy Tool Area	Organizational factors	0.097	4	Specialized agency for disaster response	0.311	2
				Disaster safety association	0.376	1
				Disaster safety information sharing	0.128	4
				Establishment of disaster safety department	0.276	3
	Personnel factor	0.371	1	Disaster safety expert	0.144	3
				Disaster safety responsibility	0.312	1
				Disaster safety concerns	0.091	4
				Director's interest and support	0.288	2
	Financial factor	0.275	2	Disaster safety R & D	0.348	1
				Disaster safety training	0.264	2
				Development of disaster safety agenda	0.187	3
				Disaster safety compensation	0.127	4
Legal factor	0.194	3	Disaster safety prevention Plan	0.294	2	
			Disaster safety information for the public	0.385	1	
			Disaster command system	0.237	3	
			Development of facilities damage standard	0.176	4	

으로 재난대응전문기구운영(0.311), 재난안전 총괄부처의 설립(0.276), 자치단체간 재난안전 정보공유(0.128)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적요인의 측면에서는 공무원들의 재난안전책임성 강화(0.312)에 대한 항목이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은 항목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재난안전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과 지원(0.288), 재난안전전문가육성(0.144), 주민의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0.091) 순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재정요인의 측면에서는 재난안전 R&D 연구개발(0.348)에 대한 항목이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재난안전 교육훈련(0.264), 재난안전 아젠다 개발(0.187), 재난안전 피해보상(0.127) 순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법제도적요인 측면에서는 재난안전 대국민정보제공(0.385)에 대한 항목이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재난안전 예방계획수립(0.294), 재난안전지휘체계확립(0.237), 재난안전시설물피해기준개발(0.176) 순으로 조사되었다.

<Table 4>는 정책과제 영역의 8개의 중분류에 대분류의 가중치를 합산하여 중분류 항목간 비교분석을 한 결과이다. 대분류의 3가지 영역별 가중치를 해당 중분류의 항목별 가중치에 합산하여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정책과제 대분류의 국민체감안전사회(0.415), 미래지속가능안전사회(0.253), 융합기술상생안전사회(0.375)의 가중치를 중분류 각각의 항목의 가중치에 합산하여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1순위는 생활속안전문화 확산(0.211) 항

목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국민생활안심서비스개발(0.176) 항목으로 나타났다. 1, 2 순위 모두 국민체감안전사회 대분류의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3순위는 미래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기준체계 재정립(0.135), 4순위는 기술융합을 통한 선제적 재난대응(0.118), 5순위는 국가비상계획수립(0.102), 6순위는 ICT 융합형 재난안전 생태계 구축(0.101), 7순위는 재난안전 융·복합 대응기술개발(0.068), 8순위는 빅데이터 기반 재난안전 생태계 구축(0.035)으로 조사되었다. 1순위~5순위 안에 포함된 중분류 항목의 대부분은 국민체감안전사회 영역과 미래지속가능안전사회 영역으로 조사되었으며 융합기술안전사회 영역의 중분류 항목들은 대부분 하위의 순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정부의 재난안전대응 정책과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동일한 방법으로 정책수단 영역의 16개의 중분류 항목간의 중요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Table 5>와 같다. 1순위는 공무원들의 재난안전책임성강화(0.115)로 나타났다. 2순위는 기관장의 관심과 지원(0.106), 3순위는 재난안전 R&D 연구개발(0.095), 4순위는 재난안전 대국민정보제공(0.074), 5순위는 재난안전 교육훈련(0.072), 6순위는 재난안전 예방계획수립(0.057), 7순위는 재난안전전문가육성(0.053), 8순위는 재난안전 아젠다 개발(0.051), 9순위는 재난안전 지휘체계확립(0.045), 10순위는 재난안전 시설물피해기준개발(0.034), 11순위는 재난안전 피해보상(0.034), 12순위는 범부처 재난안전 협의체 구축(0.033), 13순위는 주민의 재난안전에 대

Table 4. Priority evaluation result of policy sector

Sub-Category		weight	Priority
National security society	National security service development	0.176	2
	Expansion of life safety culture	0.211	1
Sustainable society	National contingency Plan	0.102	5
	Establish safety standards	0.135	3
Convergence technology win-win safety society	Preemptive disaster response through technology convergence	0.118	4
	Disaster safety technology development	0.068	7
	Disaster safety ecosystem	0.101	6
	Big data-based disaster safety Ecosystem	0.035	8

Table 5. Priority evaluation result of policy tool sector

	Sub-Category	Weight	Priority
Organizational factors	Specialized agency for disaster response	0.027	14
	Disaster safety association	0.033	12
	Disaster safety information sharing	0.011	16
	Establishment of disaster safety department	0.024	15
Personnel factor	Disaster safety expert	0.053	7
	Disaster safety responsibility	0.115	1
	Disaster safety concerns	0.033	13
	Director's interest and support	0.106	2
Financial factor	Disaster safety R & D	0.095	3
	Disaster safety training	0.072	5
	Development of disaster safety agenda	0.051	8
	Disaster safety compensation	0.034	11
Legal factor	Disaster safety prevention plan	0.057	6
	Disaster safety information for the public	0.074	4
	Disaster command system	0.045	9
	Development of facilities damage standard	0.034	10

한 관심(0.033), 14순위는 재난대응 전문기구의 운영(0.027), 15순위는 재난안전 총괄부처의 설립(0.024), 16순위는 자치단체간 재난안전 정보공유(0.011) 순으로 조사되었다. 분석결과 1~2순위가 모두 인적요인의 하위 중분류 항목으로 조사되었으며 3순위~6순위(상위 50%) 이상의 중분류 항목들도 재정요인과 제도적요인 항목의 중분류의 항목에서 나타난 반면 조직요인의 하위 중분류 항목들은 대부분 하위의 순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과제영역과 정책수단영역의 하위 중분류 총 24개 항목에 대하여 동일한 분석방법으로 항목간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Table 6>과 같다. 중요도가 가장 높은 1순위로는 생활속 안전문화 확산(0.211), 2순위 국민생활안심서비스개발(0.176), 3순위는 미래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기준체계 재정립(0.135), 4순위는 기술 융합을 통한 선제적 재난 대응(0.118), 5순위는 공무원들의 재난안전책임성강화(0.115), 6순위는 기관장의 관심과 지원(0.106), 7순위는 기본적인 국가기능

Table 6. Priority evaluation result of all items

Sub-Category	Weight	Priority
Expansion of life safety culture	0.211	1
National security service development	0.176	2
Establish safety standards	0.135	3
Preemptive disaster response through technology convergence	0.118	4
Disaster safety responsibility	0.115	5
Director's interest and support	0.106	6
National contingency plan	0.102	7
Disaster safety ecosystem	0.101	8
Disaster safety R & D	0.095	9
Disaster safety information for the public	0.074	10
Disaster safety training	0.072	11
Disaster safety technology development	0.068	12
Disaster safety prevention Plan	0.057	13
Disaster safety expert	0.053	14
Development of disaster safety agenda	0.051	15
Disaster command system	0.045	16
Big data-based disaster safety Ecosystem	0.035	17
Disaster safety compensation	0.034	18
Development of facilities damage standard	0.034	19
Disaster safety association	0.033	20
Disaster safety concerns	0.033	21
Specialized agency for disaster response	0.027	22
Establishment of disaster safety department	0.024	23
Disaster safety information sharing	0.011	24

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비상계획(0.102), 8순위는 ICT 융합형재난안전생태계구축(0.101), 9순위는 재난안전 R&D연구개발(0.095), 10순위는 재난안전 대국민정보 제공(0.074), 11순위는 재난안전 교육훈련(0.072), 12순위는 재난안전 융·복합 대응 기술개발(0.068) 순으로 조사되었다.

V. 결론 및 시사점

최근에 들어와서 재난의 성격이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재난의 규모 또한 점차 대형화, 복잡화됨에 따라 재난의 발생시점과 피해규모를 예측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재난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국민들의 사회적 불안요인은 가중되고 있으

며 정부의 재난안전에 대한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난안전분야의 고질적인 문제는 특정한 한 분야를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보완할 차원이 아니고 각 영역별로 총체적인 정부의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의 재난안전 대응정책을 위한 우선순위와 정책방향에 대하여 전문가 AHP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과제영역에서는 국민체감안전사회(0.415)가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은 항목으로 조사되었으며 정책수단영역에서는 인적요인(0.371)이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은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중분류 항목에 대한 중요도 분석결과 정책과제 영역에서는 국민체감안전사회의 측면에서는 생활속 안전문화 확산(0.517), 미래지속가능 안전사회의 측면에서는 안전기준체계 재정립(0.540), 융합기술상생 안전사회 측면에서는 기술융합을 통한 선제적 재난대응(0.320)이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은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정책수단영역에서의 중분류 항목에 대한 중요도 분석결과 조직요인의 측면에서는 범부처 재난안전 협의체 구축(0.376), 인적요인의 측면에서는 공무원들의 재난안전책임성 강화(0.312), 재정요인의 측면에서는 재난안전 R&D 연구개발(0.348), 법제도적요인 측면에서는 재난안전 대국민정보제공(0.385)에 대한 항목이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정책과제영역과 정책수단영역의 하위 중분류 총 24개 항목에 대하여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중요도가 가장 높은 1순위로는 생활속 안전문화 확산(0.211), 2순위 국민생활안심서비스개발(0.176), 3순위는 미래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기준체계 재정립(0.135), 4순위는 기술 융합을 통한 선제적 재난 대응(0.118), 5순위는 공무원들의 재난안전책임성강화(0.115), 6순위는 기관장의 관심과 지원(0.106), 7순위는 기본적인 국가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비상계획(0.102), 8순위는 ICT 융합형재난안전생태계구축(0.101), 9순위는 재난안전

R&D연구개발(0.095), 10순위는 재난안전 대국민정보 제공(0.074)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난안전 대응에 있어 정부가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측면이 정책과제 측면에서는 생활속 안전문화 확산, 국민생활안심서비스 개발, 정부의 안전기준체계의 정립 그리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선제적인 재난대응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공무원들의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노력을 같이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우선순위가 높은 항목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재난안전 대응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국민체감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생활속 안전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과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체감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안전위협요소를 미연에 방지하여 일상생활속 안전문화의식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다. 생활속 안전문화의 확산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을 삶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 선진사회를 구축하는데 있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려는 자세를 견비해야 하며, 정부는 사회의 안전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책임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안전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안전관리의 전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정부의 책임의식 제고를 통하여 생활속 안전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할 필요성이 있다. 그와 관련한 실천방안으로 재난 및 위험요소들로부터 안전한 환경문화조성을 위한 국민 맞춤형 정보제공과 시민들의 생활주변 안전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현대사회의 위험은 개인차원의 관리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안전관리체

계를 갖추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안전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고 최근에 들어와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재인식되면서 정부는 안전에 대한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각종 재난에 대한 다양한 정책추진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사고는 매년 급증하는 등 현실에서의 국민체감은 미흡하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생활주변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하고 잠재적이고 포괄적 위협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국민안전기본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미래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기준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위험은 점점 더 커진다. 위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되지 않은 즉,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회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미래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의 유형에 대비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른 안전기준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는 위험을 배척하는 사회가 아닌 위험을 취하는 사회(risk-taking society)라고 불린다. 경제·사회·기술이 발전할수록 위험(risk)은 점점 더 커진다. 위험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하지 않은 채 사고로 이어질 때 문제가 된다(Park, 2015). 특히 재난분야를 둘러싸고 정치·경제·사회·기술 등의 행정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안전기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행 안전관련 제도나 법령의 적용상황을 분석하고 제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해야 한다. 각 부처별 안전관련 법령·행정 규칙의 중복이나 혼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기준의 재설정을 통해 안전에 대한 정부 신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미래기술을 활용한 선제적으로 재난에 대응해야 한다. 미래사회의 자연·사회재난은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완벽한 대응이 불가능한 복잡한 재난이다. 따라서 재난안전분야와 최첨단 IC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재난대응역량을 강화시켜나가야 한다. 무

방비 상태에서 재난을 맞닥뜨리는 것보다는, 1분 1초라도 먼저 재난 발생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효과적인 재난대응의 지름길이다. 선제적 재난 대응은 기본적으로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산불 등의 화재가 확산되기 이전에 발견 및 초기 진압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화재 감시가 필요하며, 사회간접자본 등의 노후화에 따른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사전 징후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재난사고의 감시와 예측은 인력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물인터넷(IoT), 무인항공기(드론), 지능형 CCTV 등의 ICT를 활용한 재난안전 기술의 고도화가 필요하며 선제적 재난대응을 위해서는 실시간 감시를 통해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공무원들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시켜나가야 한다. 공무원들의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 부족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안전불감증을 대표적인 원인으로 들 수 있겠지만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인식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부족해진 사실이다. 또한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하여 전문성 및 책임성의 미흡으로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업무의 우선순위 또한 높지 않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무원들의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우리사회의 재난약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Yoon & Ryu(2014)의 연구에서도 정부의 재난안전 관리 분야에서의 담당 공무원의 낮은 책임성 부족을 지적하면서 효과적인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의 책무성 강화 및 전문성 역량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갈수록 재난의 대형화와 복잡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법제도나 예산/인력/시설, 연구개발과 같은 기반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담당공무원들의 책임성이나 전문성과 같은 관리적 요소가 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Kim, 2014; Yoon & Kim, 2016).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나 인력이 주어져도 관리가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난안전정책의 효과성은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전문가 AHP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과제와 정책수단별 상대적 중요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정부의 재난안전 우선순위와 정책방향을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을 것이다. 다만 AHP 전문가 조사와 정부의 재난대응 정책과제 간의 피드백 과정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조직, 정책 등 행정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AHP 분석이 이루어지다 보니 AHP 분석에 응한 모든 대상자들이 재난안전 부문에 특화된 전문가로 보기에 다소 한계가 있다는 점은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또한 특정한 재난분야에 국한하기보다는 재난분야를 광범위하게 다루다 보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천과제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기 보다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한계도 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보다 안전한 사회,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재난분야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향후 정부의 재난안전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방향 및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설정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18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B4914731).

References

- ABI. 2005. Financial risks of climate change. (<http://www.climatewise.org.uk>)
- Cho Seong je. 2010.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Journal of Korean Crisis Management*. 6(2): 1-18.
- Choi Seong eun. 2014. Disaster and Safety Budget Analysis and Implications for Fiscal Management Policy. *Journal of Korean Crisis Management*. 10(9): 179-203.
- Choi, Jo sun, Gwan hyeon Yeo and Ji hun Jeon. 2008. *Development of Indicators for Public Lease Housing for the Elderly: Focused on the Middle of class in Gyeonggido*. Seoul: Housing and Urban Research Institute.
- Cox, S. & Cox, T. 1991 The structure of employee attitudes to safety: a European example *Work and Stress*, 5(1): 93-106.
- Disaster Prevention and Safety Technology Institute. 2018.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 Future Strategic Research Center. 2017. *Korea's National Future Strategy*. Paju: ICON Publishing.
- Harker PT & Vargas LG. 1987. The Theory of Ratio Scale Estimation: Saaty's Analytic Hierarchy Process. *Manag Sci*. 33(11): 1383-1403.
- Hong, Jong Ho, Yong geon Kim, and Miyeon Lee. 2014. Economic Impact Analysis of Natural Disasters: Using Recursive Dynamic Global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 *Crisisonomy*. 10(11): 119-141.
- Hsiang, S. M. and A. S. Jina. 2012. The Causal Effect of Environmental Catastrophe on Long-run Economic Growth. Working Paper, Goldman School of Public Policy, University California, Berkeley, USA
- Jeong Bo yeong. 2014. Development of Guideline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Fine Dust / Dangerous Health Damage (Cardiovascular Disease), Research Report of Disease Control Division
- Jeong Ji beom, Yeong rok Kim, Gwang hui Lee, Hyeon suk Ryu, Yung yeong Oh, and Euna Pyo. 2016. *A Study on Improvement Plan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Project Pilot Evaluation Results*. Korea Institute for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016. *The direction of ICT convergence disaster safety R & D development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Research Report
- Korea Internet Promotion Agency. 2016. *4th Quarter 2016 Cyber Threat Trend Report*.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 Research Report
-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Association. 2017. *A Study on the Vision and Strategy of Future Government Organization*. Policy service report.
-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017. *The new government's social integration disaster safety field agenda and national affairs*. the 7th KIPA-KAPA Government Innovation Forum
- Kwon, Yong Soo and Hye Young Kim. 2014.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and Training in Disaster Safety Management. *Korea's Personnel Administration Review*. 13(3): 385-401.
- Kim, Sang Ho, Kwang Soon Park, You Jin Lee, and Young Mi Park. 2014. Plan for Strengthening Vocational Ability of Field Workers in Disaster Safety Management Field. Research on Safety-related Comprehensive Policy. 14-36-01.
- Kim, Young ju and Myeong jae Moon. 2015. A Study on the Cooperation Level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Administrative Publications*. 53(3): 83-116.
- Kim, Chan Oh. and Jae eun Lee. 2014. Policy Directions for Disaster Management Budget Allocation in Korea. *Budget Policy Research*. 3(2): 27-48.
- Kim, Hyeong su. 2016. Analysis of the effects of major disasters on the national economy, research on the presidential secretaria.
- Lee, Joo Ho. 2012. Analysis of the Zone Pursuit of Local Government Disaster Management Budget Process. *Korea Policy Review*. 21(1): 191-217
- Lee, Jong Yeol. 2014.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The Seoul Administrative Association Forum. (2): 6-11.
- Lee Chae eon. 2012. Study on Korea's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Korea Crisis Management Journal*. 8(4): 1-28
- Lee, Jae Eun and Woo Kwon Lee. 2014. Hybrid Disaster Response and Crisis Management System in Korea. *Crisisonomy*. 10(9):15-31
- Lee, Jae Eun and Gi Geun Yang. 2004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Disaster Management: Citizen Participation and Governance. *Modernization and Administration*. 14(3): 53-8
- Lee You Hyun and Gi Heon Kwon. 2017. A Study on International Disaster Policy Paradigm: Focusing on Implications for Korea's Disaster Policy. *Korea Policy Review*. 26(4): 255-290.
-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18. Comprehensive plan for the third disaster safety technology development in 2019
-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17. Disaster Safety Statistical Yearbook
-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10. Enterprise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Notice
-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17. Analysis of disaster safety management status and major countermeasures I [Overview: Analysis of Disaster and Safety Budget Management Status], National Assembly Budget Research Report
-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2016. Development of a goal-based disaster management capacity enhancement technique: focusing on disaster respons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Research Report.
-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2016. Analysis of public and urban disaster safety industry trend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Research Report.
- Noy, I. 2009. The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Disaster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88(2): 221-231.
- Park Doo Yong. 2015. Risk characteristics of modern society and desirable national security management system, human rights and justice, No. 452
- Park Si Won. 2016. A Study on the Adaptation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Disaster Legislation: Focusing on International Discussion. *Environmental Law Research*. 38 (1): 195-237.
- Raddatz, C. 2007. Are External Shocks Responsible for the Instability of Output in Low-Income Countrie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84(1): 155-187.
- Rasmussen, T. N. 2004. Macroeconomic Implications of Natural Disasters in the Caribbean. Working Paper No. 04/224,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UNISDR. (2013). Global assessment report on disaster risk reduction 2013.
- Yu, Seon cheol, and Gwan hyeon Yeo, 2017. Priority and step-by-step implementation of urban policy tasks in response to climate

- change: Applying AHP analysis techniques. *Korea Policy Science Bulletin*. 21(3): 1-20
- Yu, Eun ji, Chang ho Hwang and Jung sook Kim. 2018. Management Factors of Disaster Safety R & D Performance by Department: Institutional Foundation, Resources, Professional Organizations. *National Policy Research*. 32(4): 251-279
- Yoon, Geon and Chungryeol Ryu. 2014. Capacity Enhancement and Management of Disaster Safety Management Specialists, Research Report of the Korea Institute for Public Administration.
- Yoon, Geon and Cheo lu Kim. 2016. The Effect of Civil Service Expertise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Collaborative Competence.
- Yoon, Geon, Mihye Choi and Jeong uk Seo, 2017, An Empirical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s of the Disaster Safety Policy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 *Korean Policy Science Bulletin*. 21(1): 1-23.
-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6. 목표기반 지역재난관리역량 강화 기법 개발: 재난대응을 중심으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보고서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6. 공공 및 도시 분야 재난안전산업 동향분석·연구기획,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보고서
- 국회예산처. 2017. 재난안전 관리 현황과 주요 대책 분석 I [총론: 재난·안전 예산 관리 현황 분석], 국회예산처 연구보고서
- 권용수, 김희호, 김혜영. 2014. 재난안전관리분야 교육훈련의 효과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 행정학회보*. 13(3): 385-401.
- 김상호, 박광순, 이유진, 박영미. 2014. 재난안전관리 분야별 현장 종사자의 직업능력 강화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 협동연구총서(안전 관련 종합정책연구)* 14-36-01.
- 김영주, 문명재. 2015. 재난관리 조직의 협력수준과 조직효과성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53(3): 83-116.
- 김찬오, 이재은. 2014. 우리나라 재난관리 예산배분의 정책방향. *예산정책연구*. 3(2): 27-48.
- 김형수. 2016. 주요재난이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 대통령 비서실 연구용역과제.
- 미래전략연구센터. 2017.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파주: 이콘출판.
- 박관규. 2017. 재난안전시스템의 악순환 속성 및 정책방향 연구. *지역정책연구*. 28(2): 1-26.
- 방재안전기술원. 2018.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산업육성지원 연구보고서.
- 박두용. 2015. 현대사회의 위험특성과 바람직한 국가 안전관리 체계, *인권과 정의*, 452호
- 박시원. 2016. 기후변화적응과 재난재해 법제의 통합을 위한 소고: 국제적 논의를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38(1): 195-237.
- 윤건, 류충렬. 2014. 재난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역량강화 및 관리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윤건, 김철우. 2016. 공무원 전문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협업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 윤건, 최미혜, 서정우. 2017. 정부의 재난안전정책 효과성 영향 요인 실증연구. 전문가 인식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 학회회보*. 21(1): 1-23
- 유선철, 여관현. 2017.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정책과제 우선순위 및 단계별 추진방안: AHP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1(3): 1-20
- 유은지, 황창호, 김정숙. 2018. 부처별 재난안전 R&D 성과의 관리요인: 조직의 제도적 기반, 자원,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2(4): 251-279
- 이유현, 권기현. 2017. 국제사회의 재난정책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한국재난정책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6(4): 255-290.
- 이주호. 2012. 지방정부 재난관리 예산과정의 지대추구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1(1): 191-217
- 이재은, 이우권. 2014. 한국의 복합재난 대응과 위기관리체계 발전 방향. *한국위기관리논집*. 10(9): 15-31
- 이재은, 양기근. 2004. 재난관리의 효과성 제고 방안: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현대사회와 행정*. 14(3): 53-8
- 이종열. 2014.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대한 단상. *서울행정학회포럼*. (2): 6-11.
- 이채연. 2012. 한국의 국가위기관리 조직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8(4): 1-28
- 조성제. 2010.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6(2): 1-18.

- 정보영. 2014. 미세먼지/황사 건강피해 예방 및 관리 권고지침 개발연구(심혈관질환), 질병관리본부 연구용역보고서
- 정지범, 김영록, 이광희, 류현숙, 오윤경, 표은아. 2016.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 시범평가 결과(안) 마련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 최성은. 2014. 재난 및 안전부문 예산분석과 재정운용정책에의 시사점. 한국위기관리논집. 10(9): 179-203.
- 최조순, 여관현, 전지훈. 2008. 공공임대 고령자주택 대상지 선정 지표개발: 경기도 중산층을 중심으로. 서울: 주택도시연구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제 4차 산업혁명시대의 ICT 융합형 재난안전 R&D 발전방향. 연구보고서.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2016년 4분기 사이버위협 동향보고서.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보고서.
- 한국행정학회. 2017. 미래정부조직의 비전과 전략에 관한 연구. 정책용역보고서.
- 한국행정연구원. 2017. 새 정부의 사회통합 재난안전 분야 어젠다 및 국정과제. 제7차 KIPA-KAPA 정부혁신 Forum
- 홍종호 · 김용건 · 이미연. 2014. 자연재해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축차동태 글로벌 연산가능일평균형 모형의 활용. 한국위기관리논집. 10(11): 119-141.
- 행정안전부. 2017. 재난안전통계연보, 2017.
- 행정안전부. 2018. 2019년도 제3차 재난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
- 행정안전부. 2010. 기업재난관리표준 행정안전부 고시.

Received: Mar. 26, 2019 / Revised: Apr. 22, 2019 / Accepted: Apr. 30, 2019

정부의 재난안전 우선순위와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정부의 재난안전 대응정책을 위한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AHP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과제영역에서 중요도가 가장 높은 순위로는 국민체감안전사회(1순위), 융합기술상생안전사회(2순위), 미래지속가능안전사회(3순위) 순으로 도출되었다. 정책수단영역에서는 인적요인(1순위), 재정요인(2순위), 법제도적요인(3순위), 조직요인(4순위) 순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정책과제 하위영역의 8개의 중분류 항목간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생활속안전문화(1순위), 국민생활안심서비스개발(2순위), 안전기준체계제정립(3순위) 순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정책과제영역과 정책수단영역의 하위 중분류 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생활속 안전문화 확산(1순위), 국민생활안심서비스개발(2순위), 미래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기준체계 재정립(3순위) 순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향후 정부의 재난안전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방향 및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설정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주제어 : 재난관리, 정책우선순위, AHP 분석, 생활속안전문화, 안전기준체계

Profiles **Chang Ho Hwang** : He received his Ph.D. from Yonsei University, Korea in 2013. He is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t Dong-A National University. His main areas of interest are government organizations, public management, policy knowledge production(selefhoo@naver.com).